

# “2배 노력”... 전남광주특별법, 공공기관 배정 ‘우선 고려’로 후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공공기관 2배 추가 이전' 명문화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이 요구해 온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량 확대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과한 특별법은 원안과 비교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조항의 강제성과 구체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배 이상 배정' 명시 삭제... '우선 고려'로 조정

기존안은 통합특별법 시행 시 공공기관을 '2배 이상 우대해 배정해야 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명시했다. 특히 제378조 제1항에 '2배'라는 정량 기준을 담아 행정 통합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통과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규정으로 수정했다. 배정 규모에 대한 수치 기준은 빠졌고, '배정 의무' 대신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로 성격이 바뀌었다.

또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 역시 원안은

기존안 '2배 이상' 조항 삭제... 강행규정→임의규정 전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시즌2 전략 재정비 불가피 전망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완화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이 기대했던 '공공기관 추가 2배 이전'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공유재산·연구시설 특례도 조정... 현실적 지원에 방점

공공기관 유지 시 특례 내용도 일부 달라졌다.

기존안은 통합특별법시장이 공공기관장과 협의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연구 시설물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 특례를 포함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연구 시설물 축소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원 방식으로 조정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통합특별법시 인제 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해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인재 우대 조항은 유지됐다.

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된다.

◆'혁신도시 시즌2' 변수... 2배 수준 배치 전략 영향 우려

국회를 최종 통과한 특별법은 광주·전남이 추진해 온 '혁신도시 시즌2'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0개 핵심 기관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며, 통합특별법에 대한 2배 수준의 공공기관 배정을 요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전국 혁신도시에 '핵심 유치기관 5곳'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국 유일의 시·도 공동혁신도시인 광주·전남의 경우 행정청 차원에서 두 배인 10곳(광주 쪽 5+전남 쪽 5)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2배' 조항이 빠지면 향후 공공기관 추가 배정은 법적 권리 주장보다 정부와의 협상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한 주민은 "지난달 9일 이태



빛가람 나주혁신도시전경.

사진=나주시제공

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2배라는 조문이 빠졌음에도 대통령의 약속을 믿는다"

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가 앞서 정부가 요구한 추가 이전 공공기관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

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곳이다.

시·도지사는 정부가 통합특별법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한 점을 들어 핵심 10개 기관을 포함해 총 40개 기관의 이전을 요구했다.

뉴스시스

##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 선거구도 전면 재편

공약도, 연대도 초광역 단위로 전략 수정 불가피

野 시·도 후보 단일화, 의원 정수 등 변수도 많아

40년 만에 광주·전남이 한 몸으로 통합되면서 6·3 지방선거도 새판짜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후보 간 연대와 정책 공약도 초광역 단위로 정비해야 하고, 선거구역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면서 합동연설회도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광주·전남 대표주자 간 단일화 논의가 발등의 불이 됐고, 의원정수나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정치개혁도 중요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6월 통합선거의 법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출이 현실화됐고, 선거판은 통합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가 자동 폐기되고, 광주·전남을 단일선거구로 한 통합단체장을 뽑게 됐다는 점이다. 선거구 확대와 함께 후보자수가 크게 늘어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불모지 표심'을 겨냥한 합동연설회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선 물이 변수이긴 하나, 학·지·혈연과 정치적 기반을 매개로 한 정책연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한 후보 단일화는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 간 초박빙에 중의권이

두텁게 형성되면서 후보간 짜집기는 6월 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라계 간 계파 연대를 비롯,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간 교차 연대, 통합교육감·유력 기초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공조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합교육감도 시·도 경계를 넘어서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구역이 확대되면서 막대한 자금과 조직을 고려한 세력 규합이나 토론회, 포럼, 공청회 공동 개최 등 '품앗이 정치'도 트렌드화되고 있다.

특별시장, 교육감 선거 모두 운동장이 넓어지면서 공약도 광역화되고 있다. 광주 또는 전남으로만 국한했던 공약을 '통합형'으로 서둘러 변경하며, 그 안에 통합의 가치와 기대 효과, 부작용 해소책을 모두 담아내느라 전략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주청사 위치와 같은 민감사안은 물론 재정배분 방식, 특례 활용법, 교육 불균형 해소, 교직원 인사 불만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권역별(광주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맞춤형도 앞다퉈 내놓았거나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 연고 한 출마자는 "학창시절 이후 다시 광주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려니 생경하긴 하지만 아마도 모든 후보들이 같은 상황일 것"이라며 "동분서주하며 얼굴



왼쪽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정준호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왼쪽부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이름과 함께 통합 정책과 핵심 공약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 측은 "한편으로 경선 물에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짜고, 다른 한편으로 재정이나 자치 분권과 관련한 차별화된 비전을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다"고 밝혔다.

인구 비례 불균형에 따른 광주시의원 정수 확대, 3~5인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주요 이슈도 선거 판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불발에 그치고 선거연대로 온도차를 보이면서 두 당의 '호남 대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무소속 돌풍이 잦았던 전남에서의 맞대결은 벌써부터 큰 관심사다.

혁신당 1호 단재장이 있는 담양을 비롯, 여수·순천·영광·곡성·진도·강진 등지에서는 혁신당을 포함한 진보 야당과 무소속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이광수 기자

##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속빈 강정 안 된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분량동)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과 관련해 “통합의 취지와 달리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빠진 채 형식적 통합에 그친 실망스러운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 의원은 특히 특별법안 내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은 인구 규모, 도시·농촌 구조, 생활권 특성이 서로 다르다”며 “명확한 산정 원칙과 법적 기준 없이 추후 논의로 넘겨버린 것은 향후 대표성 왜곡과 지역 간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광주지역 농촌동 차별 문제가 이번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광주 농촌동은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전남 농촌지역과 동일한 각종 농업·농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국 의원은 “특별법에는 '기금 설치' 수준의 선인적 문구만 있을 뿐, 광주 농촌동을 위한 특별법안 내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은 인구 규모, 도시·농촌 구조, 생활권 특성이 서로 다르다”며 “명확한 산정 원칙과 법적 기준 없이 추후 논의로 넘겨버린 것은 향후 대표성 왜곡과 지역 간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을 전남 농촌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명시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광역시에 속해 지원은 받지 못하고, 교육·생활·문화 인프라는 농촌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도초등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전남의 인구소멸지역 학교와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청년농업인들 또한 자녀 교육 여건을 고려해 결국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즉 농촌동에 대한 차별 해소 규정과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했다”며 “통합이 진정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가장 취약한 농촌동의 삶을 지키는 조항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광주 농민과 농촌동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통합이라면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향후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준행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제 27회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

# 구례산수유꽃축제

산수유가 깨우는 봄, 그 찬란한 시작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6. 3. 14.(토) - 3. 22.(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

개막식  
일시 : 2026. 3. 14.(토) 오후 3시  
장소 : 산수유꽃축제 상설무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상관길 45)  
• 손태진과 함께 ~

주최/주관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구례군